

[좌담회]

한국 인권운동의 도전과 전망

- 대담 참석자
 - 박경석: 장애인권운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한채윤: 성소수자인권운동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설립, 비온뒤무지개재단
 - 박래군: 인권운동가, 인권재단 사람 소장, 4.16연대 공동대표
- 진행자: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
- 기록자: 김수빈 변호사, 전 한국인권재단 펠로우

본 대담 기록은 2018년 3월 26일 대학로 노들야학 사무실에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총무이사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인 박경석, 박래군, 한채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인터뷰는 최근의 인권운동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학술연구(운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대담자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편집 등 최소한의 부분만 진행자가 편집하였다.

본 인터뷰에서는 장애, 성소수자와 세월호 사건 등 다양한 인권분야와 이슈에 대한 실천활동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당면한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향후 한국 인권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인터뷰가 한국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의 향후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유의한 시사점을 되기를 기대한다.

대담에서 다룬 주요 주제

- 성소수자 인권운동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운동 현황과 과제
- 촛불시민운동 이후의 인권 현황
-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및 과제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와 현재
- 한국 인권운동과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에 대한 기대와 제안

대담

이성훈(이하 ‘성훈’): 최근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가 공동으로 인권에 학술저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창간호에 실린 이 대담은 현장 실천운동과 학술운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대담을 통해서 인권 연구자가 인권 실천운동의 현황과 고민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현황

성훈: 먼저 성소수자와 장애인권 분야에 대한 대담을 한 후 세월호 등 인권 일반에 대한 대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의제나 현안을 소개해주시고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채운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서는 어떤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채윤(이하 ‘채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이슈들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한 방향으로 모아지거나 집중하는 이슈 한두 개를 선택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성정체성이 다양하고, 각자 직면한 현실과, 다루는 주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운동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그나마 공통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인권운동만이 집중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다른 운동과 연계 및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는 어떤가요?

채윤: 혐오표현에 대해 관심은 당연히 높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화에 다수 단체의 힘을 모으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훈: 성소수자 운동 역량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채윤: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전체 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성소수자들의 활동은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워낙 전방위적으로 다방면의 억압이 존재하다보니 혐오표현 하나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거죠.

성훈: 2018년 3월 현재, 중요하지만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있나요? 과거 인터뷰에서는 군형법 관련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채윤: 군형법 문제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지난 사건을 계기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소수자 운동 진영 내에서 좀 더 토론하고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분야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미투(Me Too)입니다. 우리 내에서도 혹시 관행처럼 용인하고 있던 잘못된 성문화는 없었는지, 만약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질

차로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듯합니다.

성훈: 올해 6월 13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후보자 논의는 있나요?

채윤: 운동 진영 전체에서 주력하는 특정한 후보자 논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에 성소수자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커밍아웃을 한 후보자나 친성소수자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가 양적으로는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성훈: 성소수자운동의 관점에서 작년의 ‘촛불시민혁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채윤: 그 부분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죠. 촛불집회가 열릴 때 성소수자 단체들도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그 성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지지자들의 태도도 성소수자를 2등 시민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촛불의 의미는 이미 퇴색해버려서 함께 촛불을 든 동지로서 뭔가 평가하기에도 이제 민망할 지경이에요.

성훈: TV 토론회에서의 당시 문 후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을까요? 당시 문 후보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채윤: 성소수자를 중요한 유권자 그룹이나 중요한 사회 의제로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보좌진부터 후보자까지 ‘성소수자’에 관해 별로 검토나 논의도 안한 같아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발언할 때의 표정을 보면 정말 아무 생각이, 별 의식없이 한 말 같거든요.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 예상하지도 않은 듯한 분위기였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장애인권운동 현황과 과제

성훈: 이제 박경석 선생님과 장애 분야 인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미투운동은 기존의 인권운동에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 이전과 이후 인권운동은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미투운동이 한국의 인권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박경석(이하 ‘경석’): 미투운동은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장애여성 대한 성폭력은 수십 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미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폭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훈: 그렇다면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요? 이주여성인권 분야에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훈: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장애이면서 성소수자인 경우는 어떤가요?

채윤: ‘커밍 아웃’ 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 붙이기 힘들지요.

경석: 장애인이자 성소수자 그리고 여성이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윤: 그런데 말씀해주신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인 ‘도가니’ 같은 경우는 시설 내의 문제였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미투운동의 핵심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장애운동 내부의 문제가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석: 그런 문제들 또한 계속 제기되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센터장이나 대표 등에 의한 성폭력이죠. 물론 최근에 문제된 인물들만큼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지 않지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비장애인이고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를 구실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장이나 인권단체의 장 등 장애계의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장애계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성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5월 취임 후 10개월을 돌이켜 볼 때 가장 잘한 인권정책 및 결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인권정책은 무엇인가요?

채윤: 솔직히 말해 잘 한 것이 별로 없어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의 경우 현장과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비온뒤 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나 [대답 후 설립허가가 나왔음],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성소수자 관련 권고안을 모두 불수용하는 것 등을 보았을 때 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장애인권 분야에서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동민 열사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장애인권은 인권 중에서도 시혜와 동정의 영역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지고 나빠질 것은 없습니다. 정권의 변화가 있었지만,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총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작년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의 권고를 보고받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인권이 포함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석: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강제나 인권위의 역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훈: 얼마 전 있었던 패럴림픽이 장애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의 고착화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경석: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창에서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동권을 주장해왔지만, 평창까지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있지만, 이는 굉장히 소수만 이용할 수 있지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KTX가 있는 강릉역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평창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시내에 운행하던 저상버스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 시기에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서울에서 개최되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테지만, 평창이라는 작은 도시에서의 이동권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동권의 지역별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행사 기간 중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이동 대책을 세우라고 몇 개월 동안 요구를 했지만, 강릉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해서 농성을 한다고 트윗을 했더니 경찰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도와줘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성훈: 평창 패럴림픽 기간 중 여전히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석: 장애에 대한 극복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인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상화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채윤: 아무것도 변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대상화 문제도 변하지 않았죠. 성소수자 운동선수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키스하는 사진만 선정적으로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성훈: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7년이 되었습니다. 인권위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차기 위원장의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인권위 혁신위원 활동을 한 박래군 선생님부터 말씀해주시죠.

박래군(이하 ‘래군’): 혁신위원회 위상이 다소 애매했죠. 인권위로부터의 간섭은 없었지만,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혁신위원들이 조사도 하고, 초안 작성부터 다 했습니다. 인권위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확인한 것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과거 현병철 인권위원장 6년 동안 조직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시키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내부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권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부 조직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차관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관료들에게 휘둘린다면,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상대적으로 외부의 압력과 감시단체가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만약 인권감수성과 혁신비전을

가진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고쳐나갈 여지는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관료들 어떻게 다를 것인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료들이 그 자리까지 가면서 만들어진 내부의 인맥 등을 혁파하려면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춘씨가 처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희는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주변의 관료들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춘 장관은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골은 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깨닫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성훈: 인권위의 고유 역할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국내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및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국제인권기준과 격차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관료화되어서 사법부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인권위원 대다수를 법조인이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대로 소통 역할을 못하기에 인권 이슈로 정부와 시민, 또는 시민단체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래균: 기존의 인권운동에서 반성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법제도화되는 것에 치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법 제정을 위해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난 시기에 너무 많이 봐왔지요.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효성이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그것 외에 연성적인 것들,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를 듣게 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차별금지법은 그 결과로 제정되고, 그 법은 인권을 지키는 법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한참 국제기준을 활용하여 인권이야기를 하던 것이 잘 통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권의 세속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흐름에 대응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이명박, 박근혜 때는 다시 국가권력과의 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혐오표현의 족쇄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댓글부대를 통해 이걸 조장하고, 이런 주장이 오프라인화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는데, 주장되는 내용을 보면 허용되는 범위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충을 들고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비난을 받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훈: 인권위가 정상화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요?

래균: 인권원칙을 세우고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위의 이름으로 반(反)인권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침묵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병철 시대에 잘못된 결정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에서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평직원들도 인권단체와 인권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인권위의 문제되는 결정례 자체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서 악용되어 폐해가 반복 및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성훈: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는 인권위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권위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는지요?

채윤: 국가인권위에 대해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 긍정적 역할도 많이 했지만, 한편 제대로 성소수자 인권 옹호에 나서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1년 동안 발표를 하지 않기도 했어요. 2017년에 퀴어 퍼레이드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나름 큰 변화이긴 하지만,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래균: 반(反)성소수자 단체한테 회의공간을 대관해 줘서 UN 인권기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지요. 그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내부에 인권적 관점이라는 게 불충분하다는 것이고, 그게 일부 무자격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 의해서 조장되었던 거지요.

성훈: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해서 인권위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장애인동에서도 반(反)인권적인 기준을 세운 전례가 있나요?

래군: 2014년에 탈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취지의 결정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석: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똑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군: 시대에 따라서 나아져야 하는데...

경석: 우리 장애인동 분야는 아직 시혜와 보은의 시대에 있습니다.

촛불 이후의 인권 현황

성훈: 촛불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혐오, 탄압의 방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벌금으로 대체되는 경향, 페이스북 추적을 비롯한 빅데이터 악용 등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경석: 방금 언급한 내용들은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장애 쪽에서 혐오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혐오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차라리 일상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명목 하의, 드러나지 않는 혐오가 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래균: 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병신’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요구한다면 혐오가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위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운: 그런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촛불 집회에서 “KBS 개병신”이라는 구호에 대하여 운동 내부에서 왜 지적하거나 바꾸지 않는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어구를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 구호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석: 그 곳에 저희가 있지 않아서 시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는 공문을 보내서라도 다 사과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에서의 파이를 나누는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 즉 경제적 이해관계로 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균: 특히 요즘 적지 않은 청년들이 왜곡된 공정성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렵게 그 일자리를 얻었는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 자신의 일차리가 위협받는다든 역차별 주장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운: 저는 오히려 바보, 미쳤다 등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권감수성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인권감수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거든요.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던 부분입니다. 맥락은 사라지고 금지어들이 남게 되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도로점거 농성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의 대상이 되고, 비판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는 등, 이런 방식으로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사회에 말을 건네고자 하는데 “도로 점거했으니 불법” 이라고 하거나, 살기위해 파업했는데 “손해를 입었으니 벌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거든요.

성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같은 당사자운동 같은 경우, 그 내부에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있나요?

채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스스로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뉘진 않습니다. 나중에 성소수자 인권이 더 향상되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석: 장애쪽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고, 운동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보수가 훨씬 많습니다. 철거민 용역깡패로 장애인들이 돈을 받고 조직되어 나가기도 하고, 상이군인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척박한 시절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큰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움직일 수 있는 표도 있습니다. 이런 표는 내부경선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진보라는 형태로 살아있는 장애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해도 모두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훈: 2012년 탈북자와 이주여성이 당시 새누리당의 전국구 비례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때 그 이슈를 보수에서 선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주 운동은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기제가 없다면, 모든 것이 거리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거리에서의 갈등을 제도 안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내의 문제로 끌어들이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없어서 한 이슈가 해결과정에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 과잉현상, 이런 교착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즘은 연구집단, 정부 정책, 현장이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변화가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인권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권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래균: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다 깊은 내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내의 칸막이가 많이 생겨서, 인권운동 내에서 다른 운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권운동의 역량 또한 매우 작습니다. 인권운동을 다른 운동과 연결하려는 고민도 부족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인권운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내부에서 합의하고 있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내부 역량이 작으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스스로 비판적인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채윤: 점검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지가 문제겠지요. 이번에 충남 인권조례를 자유한국당에서 주도하여 폐지할 때, 충남에 인권단체가 없어서 폐지 반대에 주력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는 인권단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만 벗어나도 인권단체가 별로 없다니, 당혹감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인권운동이 만들어냈던 이론들이 너무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역차별 이야기’나 ‘너만 인권이냐’는 이야기가 그 예시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인권의 이름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인권이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이제 모호합니다. 한국에서 독재타도 이후에 민주화 시대에 모든 것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다뤄왔습니다.

성훈: 이 부분은 인권학회에서도 큰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인권이 유용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모든 것에 인권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고 무엇이 인권인지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재산권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판국입니다.

래균: 특정 종교에서 개종과 같은 문제에까지 ‘인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훈: 인권담론과 프레임을 역이용하면서 오히려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채운: 저는 북한인권도 왜 ‘북한인권’이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 인권이나 일본인권이라는 말은 없지 않나요?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가 시 사용어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성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인권운동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과 장애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의 인권문제,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탈북 피해자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통상적으로 보수 우익이 점하고 있고, 진보는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흥미로운 점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보수만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느냐’며 진보가 욕을 먹었다면 ‘북한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왜 남한 인권에 관심이 없냐’고 헤게모니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서로에 대한 균형을 잡을 때입니다. 아직 그 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탈북자 중에서도 장애인,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는 접촉면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성을 떠나 당사자가 교류할 수 있는 단계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분단이 서로의 인권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패럴림픽이나 장애인권에 대한 시각을 고려하면, 원조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정부가 2013년 인천회의에서 채택한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을 인권으로 표현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래균: 북한 내부의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권의 국제적인 기준을 수용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제거되어야 할 난관들이 여럿 있지요. 분단체제가 해체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남이나 북에 모두 기회가 열리는 것이겠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북에 자유권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해빙되면서 남쪽에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입니다. 그 때 만들어진 ‘빨갱이’, ‘종북’ 등 국가보안법 체제의 반공정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남북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분법 구조를 넘으면서 인권이 제대로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선을 넘기만 하면 공격을 받았었다면 이제는 북한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빨갱이, 종북 담론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인권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가치의 다원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인권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이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약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소수자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비릿 문타폰 북한 특별보고관이 성소수자였는데, 북한에서 이걸로 인신공격을 했었습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채운: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동성애자 인권이슈는 일부 국가들이 이미지 세탁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가령 대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의 수교가 끊어진 이후 국제적인 고립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독재국가지만, 게이퍼레이드가 크게 열립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강

압적으로 반동성에 정책을 펼치는데 이는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보다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정권교체를 한 것으로 국제적인 이미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는 못하는 것이고, 반면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동성결혼 인정하는 조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들이 이미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의제라서, 만약 북한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인권향상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의 억압 여부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냐’는 방식으로 남한 인권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의미가 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훈: 인권을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주변 나라와 비교하는 경우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현실을 왜곡 및 합리화 하는 기제로 쓰일 수도 있어 위험하다는 의미이죠.

채윤: 네,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인권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의 역사와 현재

성훈: 이제 시야를 넓혀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인권운동의 역사는 정치경제적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1997년 IMF 금융위기, 그리고 2017년 촛불시민혁명 전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 거리의 현장운동, 제도화와 정책, 담론과 이론이 전체 인권운동을 이끌어오곤 했는데 각 영역의 인권운동은 이러한 시대변화와 함께 어떻게 전개되어왔다고 보는지요? 특히 인권친화적이고 진보적으로 알려진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최근 인권의 사법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듯합니다. 촛불 이후의 인

권운동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경석: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중증장애인이 인권운동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적인 수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는 운동은 주체성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다 해주었을 때 효과가 있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장애인권운동의 대중적 토대나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중투쟁이 아니라 협약, 소송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해결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루하고 지난한 관계형성이 없는 이상 사상누각입니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인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아래서 발을 끊임없이 구르는 노력이 필요하고,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윤: 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이런 구조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차별인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촛불시위에서도 박근혜 비판할 때 대통령으로 비판하지 않고 여성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했어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요즘 미투가 문제되자 ‘왜 진보만 패냐’라는 식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기 부끄럽습니다. 이걸 진정 ‘혁명’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성인권이나 성차별을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이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소외되어 있던 의제를 전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제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변화를 통해 허점을 발견하고,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폭넓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등이 모두 남성중심적으로 된다면 계속해서 허점이 생길 것입니다. 촛불 이후에 미투가 생긴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성훈: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는데, 독재타도 즉 정치적 절차적 민주화 이후에 당사자 운동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촛불 운동은 부패한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즉 상부구조에 관한 것인 반면, 미투는 일상에서의 권력 즉 하부구조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 보듯이 또 다른 일상인 직장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래군 선생님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래군: 인권운동이 놓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국가권력의 폭압에 대응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유권 영역의 운동들을 보전하면서도 인권운동의 초점을 불평등과 차별의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양극화, 불평등은 시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인권의 언어로 사고해야 합니다.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을 낳은 문화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를 드러내고 깨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고민해야겠지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인권운동의 시민적 토대도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인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무척 제한적입니다.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한계를 넘어서 인권지향적으로 행위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이어져야 합니다. 국회나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인권활동가들만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적 토대의 구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채윤: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해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래균: 대통령 개헌안에서 성평등이 빠졌습니다. 차별 사유에서 ‘등’ 조차도 못 넣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윤: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래균: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국가별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안 200여개 중 한국정부는 약70여개를 불수용했는데, 성소수자와 관련된 22개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정부의 수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싸울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정부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선을 그어놓은 셈입니다.

성훈: 사회적 금지(터부)의 철폐는 모든 인권운동의 공동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 인종, 장애 등과 관련된 많은 터부들을 드러내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등장하리라 봅니다.

래균: 미투운동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일시적으로 흐름을 형성하다가 잠복할 것인지, 이후 의제들을 확장시켜가면서 우리 사회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까지 파고 들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촛불 이후 권력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운동 주체의 형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동의 주도세력들에 대한 거부의 반응도 있습니다. 제기하는 의제부터 방식, 주체까지 새로운 흐름입니다. 지속성도 중요하고, 달쁜 상태에서 좀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성과를 갈무리하면서 이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소수자 전반의 연대로까지 발전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운동과 인권활동가의 지속가능성

성훈: 한국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인권은 개선되고 인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활동가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의 재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인권운동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요?

래군: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인권운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미래의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주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경석: 장애인권운동 같은 경우 복지전달체계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적 토대와 관련해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가난해도 전장연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단체들이 물적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했을 때 장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운동의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물적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이 남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니가 쉽습니다. 장애계는 이런 악순환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악하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성훈: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어떤가요?

채윤: 저희는 전망이 밝고 어둡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당사자 또는 주제별로 각자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재정적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온뒤 무지개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 성소수자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훈: 박래군 선생님께서는 ‘인권재단 사람’을 설립하고 소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래군: 2015년에 인권운동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명에 가까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10명 정도는 심층조사를 했습니다. 소수자 운동 또는 당사자운동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계속 충원되고 있지만 종합형 인권운동, 지역의 인권단체들에서는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운동이 유지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권활동가들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운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망이 없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들이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인권운동에서 차지하는 부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발언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들이 더 대우를 받으니 활동가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10년 뒤에도 회의자료를 복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답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활동가들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나가서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이슈로 연대활동을 하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이 활동가들보다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운동 내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나, 세대 간의 소통 문제 등 조직문화도 개선해야 합니다.

채운: 최저임금이 확 뛰어서 부담은 되는데 저희 단체는 최저임금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 맞추게 되더군요. 올리면 적자가 나는 구조이지만 일단은 올려놓고 보기로 했습니다.

성훈: 다른 인권단체들의 임금 인상은 어떤 상황인지요?

래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가지는 보편적인 힘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후원회원들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인권운동에 우호적이고 운동을 지지하는 대중적 기반을 만들고 확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운동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 토대가 만들어지려면 시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부문화를 개혁하는 것은 단순히 기부금품법 개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도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어떻게 기부를 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성훈: 인권활동가의 재생산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망을 이야기 했는데,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활동가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외국의 인권운동을 보면 60대 이후에도 청년 때처럼 지속적으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채윤: 어찌보면 활동가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으니 바람직한 일자리 모델이 될 수도 있지요. 다만 한 단체에서 대표까지 몇 년을 하고나면 단체를 나가야 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니 그 다음에 대한 상상력이나 모델이 없어요. 또,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4대 보험이나 양질의 연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인권운동 활동가의 재생산과 운동의 발전에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에 대한 기대와 제안

성훈: 마지막으로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 등 인권 분야 연구와 학술활동을 하는 단체와 연구자에게 요청 또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술연구와 실천활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체적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균: 솔직히 말해 학술 연구하는 사람들이 땅 위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 실제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장 활동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인권학술과 연구를 프로젝트 용역연구 방식으로 현실의 과제보다는 돈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지양할 수 있을까요?

성훈: 인권은 크게 실천운동, 학술담론, 법제 및 정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서 강조하는 ‘4차산업’, 일자리, 저출산, 양극화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정책 의제이지만 기존의 인권운동에서는 인권 의제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운동이 그러한 이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법이 없어서일까요?

래균: 인권운동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인권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에너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등에 대한 인권적 해석과 개입이 필요하지요.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석: 장애인권운동에서 일자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년 11월부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노동의 기준 자

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운: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평소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면서,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법 중심으로만 가게 되니까 인권이 어렵고 복잡한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이고 따라서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법학회나 인권학회에서 발표자들을 변호사나 인권활동가만으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 해결책을 말할 때 어떤 법을 만들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와 구조 그리고 인권침해 문화의 기반에 대한 논의로 더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인권이 법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축소 또는 환원되어 인권운동가들에게 과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훈: 전업 인권 활동가로서 스스로 한계를 느껴서 로스쿨이나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 활동 현장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 감시와 정책 옹호와 캠페인 조직 등 현장 분야에서 활동가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활동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가 아니라 분절화가 심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권 분야 현황은 어떠한지요?

경석: 주로 복지 분야의 연구가 많습니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 등 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룹니다. 인권의 전체적인 지평, 사회경제적인 지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용역기술자’처럼 보입니다. 돈 때문에 논리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제에 관련된 용역연구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내에서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를 의료

정책상의 효율성 논리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지만 결국 예산 문제는 복지부의 문제고, 몇 명의 사례만을 근거로 연구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래균: 이명박 정권 이후에 교수들이 인권에 대한 연구나 발언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정해진 답에 맞춰서 논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돈이 나오는 것에 맞춰 굴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권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권위주의 등 인권운동과 단체 내부에서의 문화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석: 장애인권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인권은 예산의 문제가 없으니 다르지 않나요.

래균: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을 위한 예산이나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너무 부족합니다. 민간의 인권재단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자체의 연구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권운동진영 전체의 과제입니다.

성훈: 만약 독립적인 재원으로 연구를 한다면 어떤 주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인권운동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합니다.

래균: 전략은 활동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학회의 성격에 맞게, 인권운동 담론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학에서 안정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보다는 현장감과 인권감수성이 있는 소장 학자와 인권활동가들의 저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인권 자체에 대한 연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석사와 박사과정을 하면서 자신의 운동 경험을 이론적으로 성찰하면서 체계화하는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분야 성소수자 활동가들 중에 많지 않나요?

채윤: 성소수자쪽에서는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경석: 장애쪽에서는 제도, 복지 쪽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들 장애학 공리소의 고병권 선생님이 계십니다.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석사,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훈: 장시간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답은 장애인권과 성소수자 운동 현황과 과제에서 시작하여 촛불시민운동 이후와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인권운동의 역사와 현재 및 인권운동과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에 대한 기대와 제안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답이 인권운동의 실천과 연구가 서로의 간격을 줄이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데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끝